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시민 불안 커진다

흥기 사용 강력범죄 기승...광주·전남 4년간 4884명 검거 경찰 치안 확보 골머리 속 국가·민족별 맞춤형 대책 시급

지난 14일 오후 8시께 나주의 한 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 A(27)씨가 동료인 태국인 B(30)씨에게 흥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중국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대형 조리용 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쳤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경찰은 15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근무 태도 등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찾기에 흥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엔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한 인도에서 아제르바이잔 출신 30대 노동자 C씨가 카자흐스탄 국적 D(34)씨와 러시아 국적 E(23)씨를 흥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C씨는 평소 이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10명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가 무차별적으로 흥기를 휘둘렀으며, 이 과정에서 D씨와 E씨가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구 소련 출신인 이들은 광주 소재 산업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근무 이후 자주 모여 친목을 다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 흥기 등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나라 역사와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분리 채용하는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15일 무소속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외국인 범죄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광주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범죄자는 2015년 467명, 2016년 603명, 2017년 594명, 지난해 503명 등

최근 4년간 2167명에 달한다. 전남청은 2014년 778명, 2016년, 2017년 536명, 지난해 566명 등 2717명을 검거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15만30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영암 대불산단 등 산업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간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도 치안 확보 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경찰의 한 관계자는 "영암경찰서의 경우 주기적으로 대불산단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치안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면서도 "산업단지 내 외국인 범죄의 경우 흥기 등을 이용하거나 집단 패싸움 등 강력사건이 많아 출동한 경찰마저도 신변에 위협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역사·경제·외교적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분석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국적별로 선별 채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노동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동남아인의

성향 등도 파악해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대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한 외국인 노동자 전문가는 "국가별로 목숨보다 자존심을 중시하는 성향부터 사건 발생시 같은 민족끼리 뽀람 뽀람 대응하는 성향 등 민족적 특성이 다양하다"면서 "외국인 노동자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국가·민족별 특성을 잘 파악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과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인화 의원에 "경찰 등 관련 당국은 외국인 범죄사태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한국인 사이에 근거 없는 외국인 혐오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 6월 기준 광주 체류 외국인은 2만2815명(취업비자 3104명), 전남은 3만3519명(1만342명) 등 모두 5만6334명이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외국인 236만7607명(취업비자 21만 858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 외국인은 35만 5126명이다.

고려고의 '꼼수'

불법 현수막 과태료 처분 피하려 한달간 집회신고 '빈축'

고려고등학교가 불법 현수막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한달간 집회신고를 내는 등 '꼼수'를 써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광주시 북구와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고려고는 지난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학교 내부에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반발해 내건 현수막 20장을 집회 도구에 포함해 집회신고를 냈다.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고려고를 상대로 지난 달 17일부터 학교 체육관 외벽과 인도 현수막 게시대 등에 내건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혐의가 있다며 광주시 북구에 신고를 하자, 사실상 과태료

를 내지 않기 위한 꼼수에 나선 것이다. 시민모임측의 고발을 접수한 북구는 고려고측에 현수막을 지난 4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측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중 현수막은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지만, 고려고가 과태료를 피할 목적으로 실제 집회는 하지 않고 현수막을 부리고 있다"면서 "북구청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라 고려고 광고물 철거 등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를 재차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교 주변 '무비방' 단속 손 놓은 광주시

학교와 50m 떨어져 성업...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 허술

광주시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 주변에서 성업 중인 번잡업소에 대한 단속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로부터 영업신고된 '무비방' 현황을 받아 위치를 확인한 결과, 69개 무비방 중 22곳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있었다. 교육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실태 점검 시 위반 업종뿐 아니라 위반 업태도 찾아 고발하라고 요청하는 등 무비방 단속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광주에서 적발 사례가 없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대한 점검을 6887회나 벌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적발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무비방은 학교와 고작 50m, 51m 떨어진 곳에서 성업 중인데도 단 한건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무비방은 노래연습장이 아닌 음반 음악 영상물제작업으로 영업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영업장 개설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주류를 판매하거나 변태영업 행위까지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교육청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 현황을 문의하면 '단속은 경찰 소관'이라거나 '점검은 낮에 하는데 금지 시설들의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단속이 어렵다'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며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범위를 확대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관리하라는 교육부 지시에 따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라 학교나 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선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을 금지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곡성서 추수 나선 여성 남편 트럭에 치여 숨져

추수에 나선 60대 여성이 후진하던 남편의 트럭에 치여 숨졌다.

15일 곡성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께 곡성군 석곡면의 한 농로에서 아내 A(62)씨가 후진하던 남편 B(64)씨의 1톤 트럭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좁은 농로를 후진해 빠져나가려다 농로에 앉아 쉬고있는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운창호씨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6년 확정...상고 취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운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위법 운전 지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박모(27)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징역 10년 이하 형량을 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박씨 측이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능 시험장 소방 시설물 점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5일 광주서부소방서 직원들이 서귀 시험장인 서석고등학교 내 소방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번엔 한국노총...고용 유지 촉구 타워크레인 고공 농성

민중노총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이 해결된 지 나흘 만에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고용 유지 등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나섰다.

15일 한국노총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장모(49)씨가 타워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민노총의 파업과 농성으로 중단

됐던 건설 현장이 14일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했지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만 빼놓고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한국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일터에서 쫓겨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의 압박에 사측이 우리를 고용한 도급업체를 공사에서 제외하는 등 한국노총 근로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근로계약에 따라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고

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중노총 건설노조는 사측이 노노갈등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한국노총 근로자를 끌어들이겠다고 주장하며, 지난 달 17일 같은 현장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벌이다 지난 11일 사측과 잠정합의를 하고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광주시 5개 구청임구에 집회신고를 내고 다음 달 9일까지 순회 집회를 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애완견 안고 탄 승객 강제로 끌어내린 택시기사 벌금형

○-애완견을 안고 택시에 탄 여성 승객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고, 강제로 끌어내린 택시기사가 벌금형.

○-15일 부산지법형사6단독(부장판사 천중호)에 따르면 택시기사 A(67)씨는 지난 5월 27일 부산의 한 도로에서 보자기에 탄 애완견을 안고 택시에 탄 B(여·40)

씨에게 하차를 요구했는데도, B씨가 내리지 않자 욕설과 함께 팔과 손목을 잡아 강제로 끌어냈다는 것.

○-A씨는 "평소 개를 너무 싫어해 안전 운전 등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재판부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 조서 등을 종합해보면 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

/연합뉴스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3 일반 / 공유 오피스 사무실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